

9월30일 Market Index			
↓ 코스피	6838.04 (-32.77)	↑ 코스닥	855.91 (+6.11)
↓ 금리 (미국 9년)	4.010 (-0.066)	↓ 환율 (원-달러)	1352.10 (-4.60)

“지금이 바닥” 美 채권 쓸어 담는 서학개미

9월 13억 달러 등 3개월째 순매수
美 30년물 금리 5.6%대로 치솟아
전문가 “주식대비 채권매력 커져
이런 투자환경 40년 동안 기다려”

올해 초 미국 채권을 팔아치웠던 국내 투자자들이 9월 들어 대거 순매수에 나서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르며 채권 가격이 하락하자, 향후 금리인하 시 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9월 한 달여간(1~29일)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채권을 13억825만달러 순매수했다. 7월 8억8879만달러, 8월 18억2127만달러에 이어 3개월째 순매수다.

석 달째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체 미국 채권 보관 금액은 8월 말 149억 3852만달러에서 9월 28일 기준으로 156억 8598만달러로 늘어났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상승한 미국 국채 금리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CNBC에 따르면 9월 29일(현지시간) 미 30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5.613%까지 치솟으며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다. 미 30년물 금리는 6일 연속 상승세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진 데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대한 부담까지 겹친 영향이다. 같은 시각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인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국민성장펀드 2차 판매 시작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차 판매를 시작한 9월 3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광판에 국민성장펀드 안내가 표시돼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에서 물량소진시까지 판매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이 직접 첨단전략산업과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펀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2차 판매를 시작한 9월 30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전광판에 국민성장펀드 안내가 표시돼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에서 물량소진시까지 판매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이 직접 첨단전략산업과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형 펀드다.

/뉴시스

2.2bp 상승한 5.264%에 거래됐다.

일부 투자자는 현재 채권 금리 수준을 고점으로 보고, 향후 기대하는 시세 차익을 위해 채권 매수에 나서고 있다. 통상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보니, 물가인상 압력이 완화되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가격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채권시장 한 관계자는 “미국 장기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기준선을 넘어서면서 채권의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상태”라며 “현재 미국 채권 금

리를 고점으로 인식하면서 대거 미국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금융시장에서도 일부 전문가들은 국채 금리가 고점에 압박해 매수 기회가 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채권 운용사 핼코의 대 아이바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높아진 채권금리 자체를 투자 기회로 봤다. 아이바신은 “지금은 6~7% 수익률의 우량채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며 높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는 주식과 비교

해 채권의 매력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블랙록에서 2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담당하는 릭 리더 글로벌 채권 CIO의 평가는 더 적극적이다. 리더는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의 듀레이션이 약 3년이고 수익률이 7%를 넘는다며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40년 동안 기다렸다”고 말했다. 높은 채권 수익률을 얻기 위해 이전처럼 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허정윤 기자

zolkova@metroseoul.co.kr



metro

작년 주택 준공 28% ↓… “공급부족, 이유 있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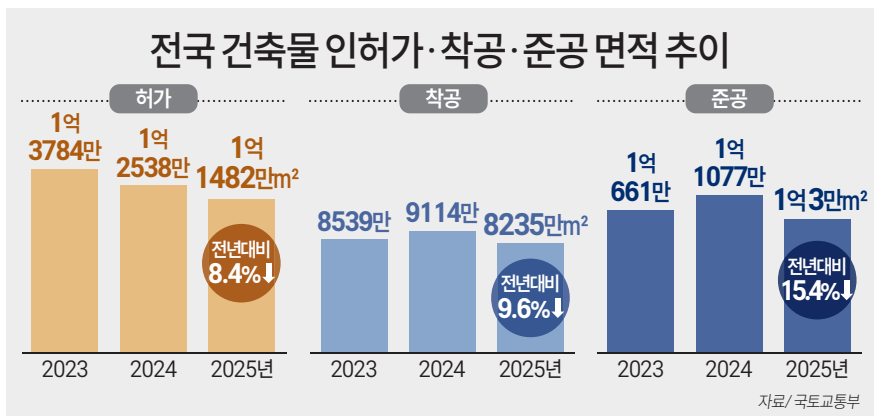
국토부, 2025 공급지표 일제 악화
전국 건축물 허가면적 8.4% 하락
주거용 착공·준공 감소폭 더 커
주택 착공 등 올해 공급지표 회복세

지나해 부동산 공급 지표가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건축물의 허가면적, 착공, 준공이 모두 감소하며 건설경기가 위축된 가운데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용의 경우 감소폭이 더 컸다. 수요는 여전히 전년대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이유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전국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건축물 허가면적은 1억 1482만 1000㎡로 전년대비 8.4% 줄었다. <관련기사 3면>

착공면적과 준공면적은 8235만 4000㎡, 1억 3600만 6000㎡로 전년대비 각각 9.6%, 15.4% 감소했다. 특히 주거용 건축물에서 착공과 준공의 감소폭이 커지면서 공급 절벽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나해 주거용 건축물 허가면적은



자료/국토교통부

4143만 6000㎡로 전년대비 5.3% 줄었다. 착공면적은 2691만 7000㎡로 19.7%, 준공면적은 3541만 6000㎡로 18.1% 각각 줄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허가면적은 전년대비 4.9% 감소했으며, 착공과 준공면적은 각각 21.0%, 17.3% 줄었다. 가구수 기준으로 당장 공급물량인 준공(입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가능할 수 있는 착공과 인허가도 크게 줄었다.

“2025년 주택건설실적 통계 확정지”에 따르면 작년 전국 주택 준공은 30만 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41만 6000가구 대비 27.9%나 줄었다.

전국 주택 인허가는 38만 8000가구로 전년대비 43만 5000가구 대비 10.8%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인천만 늘었을 뿐 서울과 지방은 각각 20% 안팎으로 급감했다. 착공은 27만 2000가구로 전년대비 30만 3000가구 대비 10.2% 감소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지표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누적 주택 인허가는 16만 3935호로 전년대비 4.6%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 인허가는 5.4%, 서울은 40.4%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 착공 물량은 15만 6396호로 전년대비 10.8% 늘었다. 수도권 1.5% 증가했고, 서울은 41.1% 늘었다.

준공은 최근 몇 년간 악화된 공급지표가 그대로 반영되면서 전국이 15만 664호로 전년대비 27.2% 감소했다. 수도권과 서울이 각각 21.6%, 19.1% 줄었다. 주택 거래는 규제가 강화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얼어붙고 있다.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4만 8359건으로 전월 대비 23.5% 감소했다. 수도권과 서울이 각각 25.9%, 27.3% 줄었다.

/안상미 기자 smahn1@



metro

발전 5사 통합 시동 내년 10월 공식출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국내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단일 법인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발전 5사 협력본부에서 이호현 제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준비위원회 발족은 지난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의 핵심 후속 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5개사로 분산돼 있던 자본과 인력을 한데 모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및 지역경제 영향 등 ‘정의로운 전환’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단일 통합회사인 ‘한국발전’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한국발전’ 통합준비위원회 발족
5개사 분산 자본·인력 한데 모아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가속

통합준비위원회는 향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통합회사의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운영시스템 구축, 통합 절차, 해외사업 이관 등 핵심 주요 사항을 다루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정부 측 인사와 발전 5사 부사장을 비롯해 에너지·전력·재무·노동·법률·정보통신(IT)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절차와 노동자 의견 청취 방식을 규정한 ‘통합준비위원회 운영규정’을 수립했다. 이어 2027년 10월 1일 한국발전의 성공적 출범을 목표로 한 세부 일정 ‘통합추진 이행안(로드맵)’과 화학적·제도적 통합을 지원·지원할 ‘합병 후 통합관리(PMI) 용역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는 원활한 통합을 위해 현장 노동자와의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같은 날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발전산업노조 등 발전공기업 주요 노동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위원회 개최 결과를 공유하고, 노사 간 정례 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발전공기업 통합은 발전 5사의 역량과 사업체계를 미래 에너지환경에 맞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더 큰 발전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선도하는 더 강한 에너지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이 대통령, DMZ 지리사고 장병 위문…“충분한 예우 반드시 챙겨달라”
/사진 뉴시스
▲국정원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당국간 비공개 합의”

▲특검, ‘계엄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서울 집값 가장 상승 눈앞…규제 넘어 공급 시 협대

▲장윤기 사형 대신 무기징역…法 “사회와 영구 격리”
▲한 총리 “2030년까지 민간 합동 로봇 20만대 보급”